

##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발신: 이주인권단체공동 (담당: 김연주 010- / 남지은 010-)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취재요청]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 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주인권 단체와 이주민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외치는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3.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는 그대로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개선은 더디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권리 없는 외국인노동력 규모 확대만 급급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빼앗기는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 낙인을 휘두르며 미등록 이주민의 존재를 단속하고 일상을 빼앗는 일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주민을 인구절벽, 노동력부족, 지역소멸에 대한 '이주민 도구'로만 여기며 각종 차별과 착취를 당연시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돌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은행까지 버젓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주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자유와 평등을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상상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제 22대 총선에서 인종차별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관련 입법과제들이 가시화 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이주정책 지형을 점검하고 이주민 권리보장 총선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내용, 선언문 및 발언문

#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 - 차별 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 일시: 2024년 3월 17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광장 계단 (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 주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 공동주최 : 이주인권단체 공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미얀마노동복지센터, 민주노동총서울본부, (사)이주민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전국급속노동조합, 전국동포총연합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살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두루,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 파주EXODUS,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대회 내용

- 1) 사회: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활동가)
- 2) 진행 순서

| 시간          | 내용        |                          |
|-------------|-----------|--------------------------|
| 13:00-14:00 | 사전행사 (부스) | 포토존 (SNS용 포토 피켓 사진 찍기)   |
|             |           | 손피켓 만들기 (참가자 각자의 피켓 만들기) |
| 14:00-14:05 | 개회        | 개회선언 (사회자)               |

|             |         |  |
|-------------|---------|--|
|             | 주제발언1   | 이주노동자/이주정책 전반의 문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 위원장)                       |
|             | 주제발언2   | 계절노동자: 레지나 (용인필리핀공동체 대표) (통역 고기복)                          |
|             | 주제발언3   | 이주민 지원정책 퇴보 비판: 웬티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베트남 상담사)                   |
|             | 주제발언4   | 이주여성: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캄보디아 활동가)                            |
|             | 주제발언5   | 성착취 피해: 김조이스 (두레방 활동가)                                     |
|             | 주제발언6   | 난민: 알렉스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통역 김연주)                              |
|             | 공연      | 파드마밴드 노래 공연  |
|             | 주제발언7   | 미등록이주민: 챗 (카사마코 활동가) (통역 이지윤)                              |
|             | 주제발언8   | 외국인보호소: 최주원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             | 주제발언9   | 중국동포: 최려나 (전국동포총연합회 사무국장)                                  |
|             | 주제발언10  | 유학생: 압둘 라티프 (코리아이션 봉사단 대표봉사자)                              |
|             | 주제발언11  | 대구 이슬람사원: 무아즈 라자끄 (경북대 유학생, 녹음 발언) (통역 김연주)                |
|             | 주제발언12  | 팔레스타인: 살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 15:10       | 선언문 낭독  | 고기복 (외노협운영위원장), 이태환(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 참가 발언자 중 2인              |
| 15:20       | 공동 퍼포먼스 | 인종차별 현수막 찢기  |
| 15:30-16:30 | 거리행진    | 서울역 광장 → 용산전쟁기념관 앞<br>(행진사회: 박동찬(경계인의뭇소리연구소), 슈몬(이주노동조합원)) |
| 16:30-17:00 | 마무리행사   | 발언 : 이주아동청소년기본권네트워크 김진 변호사<br>발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 2024 총선 이주민 권리 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차별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일시: 2024.3.21.(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내용

- 각 영역별 요구안 발표 발언 : 이주노동, 이주여성, 난민, 이주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사회보장 등

-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 퍼포먼스

- 이후 각 정당에 요구안 발송

##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계절노동자 제도 등 잘못된 제도 설계로 불법 송출 브로커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고액의 송출 비용 요구와 임금착취, 여권압류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지역제한 조항까지 만들어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유치로 이제는 대학조차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불안한 체류 상태의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업장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장 변경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난민은 전쟁 등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렵게 탈출해 한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쫓겨나가거나, 공항에 갇혀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난민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 이주배경 청소년, 유학생, 미등록이주민 등 대다수 이주민들은 권리의 바깥에 놓여 있고, 한국 국적이 없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은 반인권적인 단속추방과 기약 없는 장기구금,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에 계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한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차별을 철폐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되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사회는 아직까지도 평등함을 확인하고 인종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조차 없다. 우리는 기억 한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더

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 자유, 안전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랜 시간 이주민 차별을 철폐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권리를 위해 싸우고 연대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을 그리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원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국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만행을 당장 멈춰라.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을 중단하고,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함께 요구한다.

차별혐오 정치 중단하고, 이주민에게 자유, 평등 안전을 보장하라!!!

**2024년 3월 17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참가단체 일동**

## <주제발언 1>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오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오신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오는 3월 21일은 인종차별 철폐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55년 전에 UN인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고 평등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인종차별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이주민 숫자는 250만 명이 넘습니다. 이주민들은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숏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고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산업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주노동자 숫자를 해마다 대폭 늘리고 있지만 처우개선, 지원 정책, 권리개선은 없습니다. '권리 없는 인력 확대'가 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입니다. 인종차별적 법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에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조차 박탈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정해진 지역 내로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까지 실시해서 지역 이동권마저 박탈했습니다. E-9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회화강사(E-2), 예술흥행(E-6), 전문직/준전문직(E-7), 계절근로(E-8), 선원(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권리보장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법제도를 개악해서 이주노동자 권리 축소하고 사장들의 권리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근로조건, 노동강도, 저임금, 기숙사 상황, 안전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윤만 생각 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 안전, 주거 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주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방안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력 부족,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해 정부는 이주민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얘기만 하고 그걸 이민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도구가 아니고 기계나 노예가 아닙니다! 정부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권리보장하는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정책 얘기하려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총선에서 정치권이 이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멈춰야 합니다. 인종차별 없애고 이주민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등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정치를 끝내고 이주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 <주제발언 2>

레지나 (용인필리핀공동체 대표)

In 2022, I began consulting on issues faced by migrant seasonal workers (SWs) in Korea. At first, I thought that non-payment of wages, wage theft, or excessive deductions for accommodation expenses were exceptional cases that only occurred with some employer.

However, through my consultations, I discovered a disturbing reality: wage exploitation wasn't isolated incidents, but a systematic practice often involving Korean brokers. The very program itself, the Seasonal Worker Program (SWP), seemed to have inherent flaws.

When I heard that SWs who were supposed to be returning to the Philippines in September last year had no winter clothes due to the three-month extension, I went to distribute winter clothes to them and was shocked to hear what they said.

9~10 SWs live in a village hall or container accommodation, and each person is deducted 400,000 won for accommodation expenses. The employers did not give the salary directly to the SWs but to a broker.

Despite working hours are 11-hour a day, seven days a week, their average monthly salary was a meager 900,000 won, far below the minimum wage they rightfully deserved. In reality, considering their workload, they should have been earning closer to 3-4 million won per month.

Korean brokers effectively stole the money SWs rightfully earned. The employment contract states that overtime pay, etc. can be received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employer. However, SWs received nothing, and all this was exploited by brokers. Most employers deposited wages into SWs' bank accounts, but the brokers confiscated these accounts entirely. This lack of transparency made it impossible for SWs to verify their full earnings until they returned home. To further control SWs, brokers, and even some county officials withheld passports, foreign registration cards, and passbooks.

SW who came to agricultural SW, and there were cases where SWs worked at construction sites and at sea on ships. In the area where SWs worked, the daily wage was 150,000 won, but employers only gave SWs 70,000 won.

When complaints were made about salary calculations, the employer contacted the broker and had the SWs return home early.

Despite a recent fact-finding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JCMK, 1218forall and media investigations, the situation remains unchanged.

Korean government officials still work with Korean brokers. Last Lunar New Year's Day, SWs who informed public officer that they were working for companies they were not assigned to were faced with something absurd. The officer discussed the matter with the broker and sent the leader, one of the complainants, home early. In Wando, Jeollanam-do, when SWs raise a problem, public officers ask brokers to solve the problem. Civil servants proudly mention the name of the broker they work with. However, SWP is illegal if a broker gets involved in this program. Intermediary exploitation is illegal, not directly paying wages is illegal, and confiscating passbooks, passports, and foreign registration cards is also illegal.

When SWs contact an NGO to claim their rights or leave the company, brokers send the five co-workers who entered Korea together with the SWs who left Korea early. Because they are held jointly responsible, it is difficult for SWs to raise issues even if they are treated unfairly.

Even after this fact became known to media outlets such as YTN and KB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estigated, Wando county officials are entrusting work to brokers and are cooperating with the exploitation of SWs. Do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hink it is okay to discriminate, exploit, and abuse SWs? The current SWP system is a breeding ground for exploitation.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dismantle the broker system, enforce labor laws, and ensure SWs' rights are protected. This is not just about upholding Korea's democratic values but about treating human beings with dignity and respect.

The Korean government must have the will and measures to eradicate brokers in SWP. There must be an awareness that the current implementation method is human trafficking. SWs are also migrant workers and have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If Korea is a country that has the will to prohibit racial discrimination and human trafficking, it must examine the causes of damage to SWs that have occurred so far and propose solutions. We oppose racism of any kind.



## <주제발언 2 번역문>

2022년부터 한국의 농촌 계절 노동자(SW)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미지급, 임금 절취, 과도한 숙박비 차감 등은 일부 고용주에게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놀라운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임금 착취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한국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계절 노동 프로그램(SWP)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계절노동자들이 겨울옷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겨울옷을 전달하러 갔을 때,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9~10명의 계절노동자들이 마을회관이나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숙박비로 개인당 40만 원이 차감되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을 계절노동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브로커에게 주었습니다.

하루 11시간, 주 7일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월급은 겨우 90만 원 정도로 법정 최저 임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한 달에 3~4백만 원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국 브로커들은 계절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벌어야 할 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에는 초과 근무 수당 등은 고용주와의 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브로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계절노동자의 은행 계좌에 임금을 입금했지만, 브로커는 이 은행계좌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계절노동자들은 귀국할 때까지 자신의 전체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절노동자를 더욱 옥죄기 위해 브로커와 심지어 일부 군청 공무원까지 계절노동자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농업 계절노동자 비자로 온 경우에도 건설 현장이나 선박에서 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절노동자가 일하는 지역의 일당은 15만 원이었지만, 고용주는 계절노동자에게 겨우 7만 원만 주었습니다. 임금 계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계절노동자를 조기 귀국시켰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JCKM, 1218forall, 그리고 언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한국 브로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날 연휴에는, 자신이 일하는 곳이 배정된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무원에게 알린 계절노동자들이 터무니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무원은 브로커와 협의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인 리더를 조기 귀국 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계절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브로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협력하는 브로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계절노동자제도에 브로커의 개입은 불법입니다. 중간 수익과 착취는 불

법이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통장,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계절노동가 NGO에 연락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를 떠나려고 하면, 브로커는 계절노동자와 함께 입국한 5명의 동료들 조기를 귀국시킵니다.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계절노동자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YTN과 KBS와 같은 언론 매체 보도와 국가인권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남 완도군은 여전히 브로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계절 노동자 착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계절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계절노동자 제도는 착취의 온상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브로커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을 집행하며, 계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계절노동자제도에서 브로커를 근절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시행 방식이 인신매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계절노동자들 역시 이주 노동자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인종차별과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라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계절노동자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 <주제발언 3>

#### 이주민 지원정책의 퇴보

웬티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베트남 상담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주민 지원정책의 퇴보'상황을 말씀드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막고자 여러분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2024년 이주노동자 도입이 작년보다 몇 배 더 늘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지시켰고, 갈수록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가 늘고 있는데, 이주여성상담소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모순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제언을 통해 2013년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한울타리쉼터를 함께 설립해 수많은 가정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이주여성을 인권 보호해왔습니다. 이주민정책과 여성정책의 결합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지난 10년간 이주여성 인권 현장에서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이주여성 포함된 가정폭력방지법개정 발의', '이주여성상담소 설립 근거' 등의 정책 실현하였고, 현 여성가족부 이주여성상담소 9개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남편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베트남 이주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남편, 시댁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된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6 비자 소지 이주여성은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학생(D-2)들은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등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유학 비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여성 한 명이 지난달에 출입국의 단속에 당해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강제출국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녀도 엄마를 따라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기 급한 정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정부는 '외국인 돌봄 인력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자'는 차별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출입국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각지대의 이주민들을 '미등록'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은 외국인 관리를 더 편리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로 상담받은 이주여성의 수는 여전히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연평균 실적은 13,000건에 달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에 늘어남에 따라 이주여성상담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선주민 폭력피해 지원체계에 비하면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이주여성상담소는 고작 10개소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기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이주민 정책의 퇴보, 인권 정책의 퇴보, 소수자 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퇴보된 이주민 지원정책으로 인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로 짓밟힌 이주민의 인권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회복에 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이주여성상담소의 기능 확대와 언어권별 이주민 당사자 상담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별 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하라’**

감사합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온 웬티현입니다.

## <주제발언 4>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활동가 모선우입니다.  
활동하면서 많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상담 5,345건 2022년 4,416건 이는 2022년에 비해 929건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상담은 2023년 733건 2022년 522건 2022년에 비해 21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다누리콜센터는 가정폭력상담 14,133건 2022년 10,778건 이는 2022년 비해 3355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성폭력상담은 2023년에 1,207건 2022년 870건 2022년에 비해 3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담통계만 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 보호와 폭력피해 생존자의 안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임금차별 문제도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33명이 참여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82%는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고, 46.8%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사람이 70%입니다. 이주여성라는 이유로 몇십 년을 일해도 호봉도 경력도 인정하지 않고, 약 39.5%가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안전망 개선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숙소라 제공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 가사노동, 농업 등 여러형태의 노동인력이 필요해 이주노동자를 배치하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폭력피해, 열악한 노동환경, 임금차별 등이 있어 앞으로의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이익만을 다루지 말고, 이주노동자를 시민으로 존중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주여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삶의 맥락으로, 또 사회적 맥락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모두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평등한 세상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 <주제발언 6>

알렉스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Ladies and gentlemen,

Today, as we gather to commemorate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we are reminded of the profound impact discrimination has on individuals, communities, and societies worldwide. It is a day to reflect on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stand against prejudice and promote equality for all, regardless of race, ethnicity, or background.

Refugees those individuals who have been forced to flee their homes due to persecution, conflict, or violence. These brave souls have embarked on perilous journeys in search of safety and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Yet, upon reaching foreign shores, they often encounter barrier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et us not forget that refugees are not simply statistics or headlines; they are human beings with dreams, aspirations, and untapped potential. They bring with them unique talents, skills, and experiences that enrich our societies in countless ways. Yet, too often, they face hostility, xenophobia, and systemic inequalities that hinder their integration and advancement.

As we stand here today, let us reaffirm our commitment to upholding the inherent dignity and rights of every refugee. Let us strive to create inclusive societies where diversity is celebrated and where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can thrive and contribute meaningfully.

Let us reject the politics of division and fear, and instead embrace compassion, empathy, and solidarity. Let us work together to dismantle the structural barriers that perpetuate racial discrimination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refugees to rebuild their lives with dignity and respect.

In the words of Nelson Mandela, "No one is born hating another person because of the color of his skin, or his background, or his religion. People must learn to hate, and if they can learn to hate, they can be taught to love, for love comes more naturally to the human heart than its opposite."

On this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let us stand together

as allies in the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Let us build a world where every individual, regardless of their race or refugee status, can live free from fear, prejudice, and persecution.

lastly please remember  
"Refugee is not a choice"

Thank you.

## <주제발언 6 번역문>

오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차별이 전 세계, 개인, 커뮤니티,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은 인종, 민족, 배경에 관계없이 편견에 맞서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난민은 박해, 분쟁 또는 폭력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용감한 영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 도착한 이들은 종종 장벽과 편견, 차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난민은 단순한 통계나 헤드라인의 대상이 아니라 꿈과 열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매우 풍요롭게 하는 독특한 재능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혐오, 그리고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해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히는 상황을 너무나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난민의 고유한 존엄과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번창하고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열과 공포의 정치를 거부하고, 그 대신 공감과 연대로 함께합니다. 인종차별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장벽을 허물고, 난민들이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빌리자면, "피부색이나 배경, 또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미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반대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동지로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인종이나 난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두려움과 편견,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난민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언 7>

### 차별 혐오 정치는 이제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 중단!

챗 디마아노 (카사마코 활동가)

한국 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KASAMMA-KO)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규모 차별과 이주민 혐오 정치를 규탄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합니다.

한국에는 약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차별과 외국인 혐오 정치로부터 취약하고 한국 정부에 의해 단속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에 매우 적극적인 후보까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대부분은 계약 위반, 한국인과의 파탄난 결혼 등의 피해자이고, 자국에서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값진 기여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동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형태의 억압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화 중단하라!

국제 연대 만세!

## <주제발언 8>

### 최주원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안녕하세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모임 '마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마중'의 이름을 걸고 많은 이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가 '마중'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스스로를 '마중활동가'라고 소개하게 된 지 겨우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이르러서야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뒤늦게, '외국인보호소'라는 폭력을 인지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민은 '외국인보호소'에 갇힐 일이 전혀 없기에,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반면 청중 여러분 중 외국인보호소라는 폭력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애인이, 친구가, 혹은 이웃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거나, 현재 구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 단속된 후 강제퇴거, 즉 추방을 명령 받은 비국민이 구금되는 곳입니다. 오늘 발언에서는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을 바로잡고자 이를 외국인'구금'소라 고쳐 부르겠습니다. 강제추방을 명령 받고 외국인구금소에 구금된 비국민은, '보호일시해제'제도를 통해 임시적으로 보호소에서 풀려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을 '자진출국'하는 그날까지 외국인구금소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외국인구금소의 목적이 추방에 있으므로, 구금소는 구금비국민이 "도저히 여기에선 못살겠다"라며 제 발로 대한민국을 떠나게끔 악의적으로 운영됩니다.

제가 처음 화성외국인구금소를 방문했던 날, 마치 감옥처럼 생긴 이른바 국가보안시설에 구금된 비국민을 면회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그날을 떠올려봅니다. 저는 면회신청서에 저의 신상정보와 면회를 요청한 구금비국민의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해 제출한 후,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한 채, 플라스틱 창과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실에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지났는지 모를 면회시간 30분이 모두 다 되어 서로에게 끝인사를 해야 했던 때, 저는 상대에게 "I hope you have a good day.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로서는 상대에게 달리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전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돌아온 대답은 "There isn't a good day here." 외국인구금소에 '좋은 날'이란 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구금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경솔한 인사를 건네 실수한 것이지요. "외국인구금소에 '좋은 날'이란 건 없다"라는 문장이 외국인구금소의 현실입니다.

외국인구금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가 '외국인구금소에 구금된 비국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제게 질문할 때면, 저는 그만 당황해버리고 맙니다.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구금소에서는 구금비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공무원에게 감시당하고 통제 당하는 이곳에서, 대체 무엇을 짚어 어려움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금된 비국민은 하루 단 30분, 구금소 실내를 벗어나 실외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실외 운동장에 나갔다가 주어진 30분이 지나고도 구금소 실내로 돌아오지 않는 저항행동을 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외국인구금소 안에서 구금소가 강제하는 통제에 불복하며 구금소라는 폭력에 저항하는 용감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저항은 샴푸를 들이켜 마시거나 자신의 손목을 긋는 행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국민이 국가에 의해 구금되어 통제 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외국인구금소 1층에는 구금비국민에게 전달되길 기다리는 수많은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구금비국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캐리어의 수도 늘어납니다. 법무부에서 '미등록비국민 집중단속'을 엄포할 때면, 어김없이 구금소 1층의 캐리어 수가 늘어납니다. 법무부 출입국에 말하고 싶습니다. "비국민을 잡아들여 구금하고 추방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비국민을 단속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폭력 그 자체가 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마중'에는 구금비국민이 겪은 외국인구금소의 폭력을 폭로하는 제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받은 '마중'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중'은 법무부 출입국이 저지르는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며 헤쳐 나가기보다는, 그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출입국이 행하는 폭력에 간신히 사후적으로 반격하며, 좌절하고 후회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지금 '마중'은 과연 우리가 출입국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길을 간신히 더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입국이라는 폭력에 함께 맞설지 고민할 동료들을 찾습니다. 고민을 나누며 우리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언 9>

### 대한민국에서의 중국재외동포의 어려움과 차별

최려나 (전국동포총연합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온 재외동포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차별과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부터 비자 발급, 그리고 국적 취득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회는 주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1. 교육에서의 차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중국재외동포 자녀들은 학교에서 한국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대우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 비자 발급의 어려움:

H2 비자는 취업 비자로서 유연한 활동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합격을 몇 차례 거듭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3. 국적 취득의 어려움:

중국에서 온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애국가 가사를 발음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적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장벽이 아닌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사회적 차별:

한국 사회에서도 중국재외동포들은 종종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주거지 선택에서 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5. 문화적 이해 부족: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국 문화와 재외동포들의 신념 및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상호 이해가 부족해지고, 결국 더 많은 차별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를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다소 미흡합니다. 중국재외동포들은 여전히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동포총연합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니다. 그리고 문화 교육과 상호 이해를 통해 모든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주제발언 10>

### 2023년 겨울, 한신대 유학생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폭력적 정책과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규탄

압둘 라티프 (코리에이션 봉사단 대표봉사자)

최근에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생명의 가치가 사람의 종교 혹은 권력의 의하여 정해지는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을 수십년 동안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던 국가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테러리스트인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테러국이 가자지구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저지르고 있는 인종학살을 금전적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국가 및 기업 모두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그동안 그들은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여러 국가 땅에 쳐들어가 수백 만명의 사람들을 학살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놈들 자신들이 가장 죄가 많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평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의 일반인을 학살했으며, 대부분 여성들이나 아이들입니다. 남의 땅에 쳐들어가 테러국을 세운 이 놈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팔레스타인이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복수는 매우 후회스러울것입니다.

이어서 국내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미등록 이주민들은, 몇명 강패들로 설립된 ○○연대 회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자주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신체를 촬영하고 통신매체에 올리거나 다양한 부정행위를 하고, 이주민들을 경찰에 잡아다주기 위해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 각종 폭행부터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차별을 다루는 법이 강력해져야합니다. 한신대 유학생강제출국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법 앞에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권 침해, 인종차별 모두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했다면 몇명 교직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소위 '선진국'의 국민에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못하죠. 그 국가의 대사관도 가만히 봐주지는 않겠죠. 우즈벡, 베트남 등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원할 때 원하는 대로 대하는 현실은 법개선의 필요를 잘 드러냅니다. 학생도 소비자라고 보자면 소비자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사건을 조사하고 따로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결과조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들은 한국 법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건강악화로 출국하지 못했던 두 학생도 아직 학교에 등교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국제교류원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학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맡긴 법무부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못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전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합니까? 유학생이 미등록이주민이 되어버리면 그게 왜 학교의 탓이고, 왜 학교가 유학생모집 제한을 받아야합니까? 유학생 모집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늘 우리가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를 제한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사자로서 바로 강력하게 대응하여야만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 <주제발언 11>

무아즈 라자끄 (경북대 유학생)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providing me the opportunity to explain you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mosque issue and very unfortunately I'm not here to explain some good situation.

So we are currently going through a very hard phase of this whole project. And we are constantly facing like we are feeling that we are being corner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whoever is like playing the role inside this situation.

So let me explain you what happened in the previous few months. So actually after the Supreme Court gave the permission to construct our mosque and it is legal to construct the mosque here. We actually asked our site manager to resume the con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and he asked us that now the prices has been raised and we need to increase the cost which we initially contracted with him. So we agreed to that and we discussed like the new costs and we came into a mutual contract and we paid him a big amount of that money already.

And then we were like constantly asking him to please continue this con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And like every time he was kind of making excuses today the weather is not good today their thing is happening today the people are coming. And also like it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to ensure the rule of law and to hold on the protests or like those kind of things because we have the permission of the Supreme Court.

So that was what we were asking from him but in our discussions he constantly kept mentioning that someone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someone from the district office is like constantly pressurizing him to leave this construction and to leave to leave this site.

And we did told him that if this is the situation so you should tell to him that I'm just a site manager you should talk to the owners and you should deal with the owners not with me. But like he kept on saying like they are constantly pressurizing me and you don't know like what I'm going through. So suddenly we got to know that he actually after this pressurizing things which he discussed with us suddenly we got to know that he made a stud-bolts issue which you might have heard. And actually we came to know about that after several months not not immediately he kept it hidden from us.



And we first got to know it when we received the notice from the district office which like who instructed us to correct this mistake. So because we are non-technical people we are students here we don't know the the technicalities of the construction. So we were only responsible to pay him the money he wa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But then like he said that when we talk to him like please correct this mistake as soon as possible we just are paying you to construct this mosque according to the blueprints. And he said don't worry this is like a very normal issue I will correct it so we were relaxed okay he will look after that. And then what happened is like for several weeks he didn't do any progress in that thing.

And then suddenly we received another notice from the district office like asking like they will halt this construction if we do not correct. So then we became much more fearful of like they will halt this construction. So we talk to the site manager and then we also ask him like okay we will provide you some help with third firm who can analyze the safety report for you and then they will submit. So also like we did it from ourselves we prepared a safety diagnosis report which was not our responsibility. It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ite manager but still we prepared it on our behalf.

And then we submitted it to the district office within the third deadline but then they didn't review it within the deadline. And after the deadline passed they just issued the halt order that we haven't like followed their instructions and so that's why they are halting this construction. So that's like a very disappointing situation very disappointing behavior from the district office as well and because like they are it feels like they are siding with the opposing groups.

And then in the meanwhile during our mediations with the district office they constantly said about this like just we will give you the money we will buy this place from you and just look another place for yourself. So this was like very shocking for us as well and very disappointing for us becaus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responsible to ensure the rule of law they should not take part of any side.

So this is like what is happening to us and now we are being cornered and then on the top of that so I'm very sad to say that we are being blackmailed and the site manager was constantly asking for more and more money.

And even for correcting his own mistake the stud bolt issue it was his mistake because of which we are facing all this trouble and because of which the construction was halted. So then he was even asking the money for that and more and more money so we did try to persuade him and we did try to request him to please continue the construction as per the plan but unfortunately we had to go to a lawsuit against him.

So now we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ite manager so this is like what's happening and our whole community is very disappointed and everything is happening and people think that foreigners are constructing the mosque against the blueprints but I think this is like a very bad perception going against us.

We are non technical people we are not constructing this mosque ourselves we are just paying it and the constructor is a Korean person the inspectors are Korean people and the district office consists of the Korean people everything and even the decision was provided by the Korean court.

So if you need to blame someone then blame your own people because like we really feel disappointed when we are being cornered as well as then we are blamed as a foreigner and the people who hate foreigners they are like coming into forces and trying to cash this opportunity against us.

I hope one day we can see that this mosque is being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law. Thank you so much.

## <주제발언 11 번역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람사원 문제의 현재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상황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당국과 이 상황의 배후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슬람사원 건설을 허가하였고, 이곳에 이슬람사원을 건설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시공업체에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재개해 달라 요청했더니 가격이 인상되어 처음 계약한 비용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동의하였고, 새로운 비용을 논의하여 계약을 맺은 뒤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번 날씨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등의 이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치를 보장하고, 시위를 막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것이었지만 그는 저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누군가, 특히 구청의 누군가가 이 공사를 떠나고, 이 현장을 떠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시공업체일 뿐이니 그가 아니라 소유주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후 '스터드 볼트(Stud-bolts)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당시 바로 알지 못했고,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공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시공업체에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설계도에 맞게 이슬람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 가능한 한 빨리 이 실수를 해결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가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안심하였지만, 몇 주 동안 그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구청으로부터 다시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시공업체에게 안전 보고서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제3의 업체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업체에서 안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신하여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제출기한 내에 그것을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기한 내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나자 우리가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반대세력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청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이 이 땅을 살 테니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법치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며, 그들이 어느 한쪽에 편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협박을 당하고 있고, 시공업체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슬프습니다.

스터드 볼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시공업체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를 설득도 해보고 계획대로 공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고, 우리 커뮤니티 전체는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인이 설계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저희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 모스크를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설업자도 한국 사람이고, 검사관도 한국 사람이고, 구청 직원도 모두 한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도 한국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자국민을 비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기회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언젠가 이 모스크가 법에 따라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언 12 번역문>

(영문번역) Peace be upon you, God's mercy and blessings. First of all, we thank you for your continuous presence and your increasing interaction with the ongoing genocide in the Gaza Strip...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I am conveying your various efforts to my friends in Gaza and they are proud of you and your efforts.

After nearly 160 days of aggression, the number of martyrs has exceeded 30,000, in addition to more than 70,000 wounded, in addition to thousands of missing persons, in addition to thousands of destroyed houses, and even entire residential neighborhoods have been blown up and destroyed.

The displaced people are living in harsh humanitarian conditions that lack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fe, including water, food and medicine.

Hunger has begun to kill children and women, and more than 24 cases of death due to malnutrition have been recorded after running out of food in the city and north of Gaza, and the issue is getting worse.

After 160 days of aggression in Gaza, the Palestinians are still steadfast and resistant, preferring to die in their land and face alone the Israeli Zionist criminality in light of the complicity and fear of Arab rulers and with American and Western support.

The occupation tried to obliterate the Palestinian cause during the past 75 years after its occupation of Palestine. He thought that by possessing military power, he could resolve the conflict.

He did not know that the Palestinians' belief in their right and their willingness to sacrifice in order to achieve freedom is too great to be defeated by force.

That is why we are still continuing to resist in all its forms until the liberation of all the land of Palestine.

In conclusion, I say that your activities and marches have a great impact on the Palestinian cause, and we must accumulate this effort, build on it and invest it well so that we contribute together to the victory of Palestine and the liberation of all the land of Palestine.

Thank you, thank you

(한글번역)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량학살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에 감사드립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다양한 노력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60일 동안의 침략으로 순교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고, 7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수천 명의 실종자,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주거 지역 전체가 폭파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은 물, 식량, 의약품 등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 열악한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아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들이 사망하기 시작했고, 가자시티와 가자지구 북부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가 24건 이상 기록되는 등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침공 160일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통치자들의 공모와 공포,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범죄에 홀로 맞서는 것을 선택하며 굳건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점령 이후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군사력을 보유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믿음과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가 무력으로 물리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이 해방될 때까지 모든 형태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활동과 행진이 팔레스타인 대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 투자하여 팔레스타인의 승리와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의 해방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행사 발언>

김진 (이주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공감했듯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국적, 체류자격에 근거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되며, 각 국가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아동이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에 노출됩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없는 난민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등은 태어나서 출생신고할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아동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전학이나 입학이 거부되어도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아동 등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합쳐 약 2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더 큰 차별에 노출됩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14세 이상의 아동은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이 가장 익숙하고, 한국 밖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는 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강제추방과 구금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함께 구금됩니다. 작년에는 3세 아동과 5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호실에 구금되어 단체들이 함께 법무부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제도의 개선은 있었습니다. 법무부 지침의 개정으로 한국에서 6~7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닌 아동은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며, 지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등으로 신청을 고려하지조차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 구제대책도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기도 하고, 각종 대회 참가 등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할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부터 보육, 교육, 건강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같은 권고를 받으면서도 예산과 사회적 합의



를 이유로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주아동은 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또 어떤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인종과 국적,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